

피해자 원치 않아도 ‘스토킹 범죄’ 처벌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 시행 이후 112 신고 증가 추세
올 1~7월 광주·전남 825건 접수
구속 저조·징역 1년 이상 드물어
보복범죄 등 신변보호 방안 검토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변보호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 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관련 범죄 신고가 대폭 증가했지만, 범죄 대응에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 재범 차단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데다 살인과 폭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 10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막고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전자기기를 통한 연락을 금지한다는 게 보호 조치의 전부다.

실제로 광주·전남의 경우 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광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119 신고 건수는 360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307건)보다 53건(17.2%) 많았다.

같은 기간 전남도 지난해 335건에서 올해 465건으로 130건(3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를 합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벌칙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가 상대적 심각한 사례에서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 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대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은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61차례에 걸친 전화와 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스토킹한 남성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밤낮없이 여성을 스토킹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협박까지 한 남성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형사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스토킹과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자원봉사 박람회 17일 오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막한 ‘자원봉사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친환경 비누를 만들고 있다. /김태규 기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앞두고 사고 잇따라

경찰 “홍보·계도 활동 강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전세 버스 70대 운전자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쳐 숨지게 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광주 서구 농성동 한 교차로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 중인 공사로 교통이 혼잡해 우회전 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14일부

터 이틀간 현장 조사에 나서 우회전 구간 교통안전 시설물, 우회전 멈춤 표지판 등을 점검했다. 본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남은 기간 홍보·계도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대형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전자들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위반 차량이 있을 때 계도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무등산 원효지구 보상 노린 사업자 등록 ‘꼼수’

국립공원 사실 관계 파악 나서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 무등산 원효사 지구의 일부 건물주들이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립공원공단 측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8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에 따르면 원효사 지구 일부 상인들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보상이 이뤄졌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2016년 원효지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상가는 16개에 불과했지만 보상 기준이 마련된 이듬해에는 사업자 등록 수가 45개로 늘어났다.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영업을 하지 않던 건물주들이 마치 영업을 한 것처럼 건물 내부를

꾸며놓았다는 게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영업 보상은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영업에 따른) 납세 실적을 확인하게 돼 있다”며 “계곡에 위치해 여름철에만 장사하는 곳도 많아(상점) 겉모습으로만 실제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은 민원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원효사 지구 이전 사업은 2013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무등산 경관·환경 훼손 논란, 이용인구 감소와 슬럼화를 겪으면서 추진됐다.

현재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찬기 기자

광주·전남 11년만 9월 폭염특보

광주·전남지역에 11년 만에 9월 중순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1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담양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17일 나주·화순으로 확대 발효되며 이날 밤 8시까지 유지됐다.

9월 중순 광주·전남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앞서 지난 2011년 9월 16일 광주와 구례, 고흥, 광양, 함평, 진도, 장흥, 나주, 화순, 순천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바 있다.

기상청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동해상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이날까지 전국 곳곳에서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혜린 기자

담양토지 (매매)

▶ 담양 프로방스 앞

- 임야 : 7,500평
- 용도 : 개발부지, 관광농원, 임산물식재
- 가격 상담

경매 교육 [기초반]

-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010-2614-9801